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처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2020년 6월 4일(목) 오후 2시


이슈대응 집담회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부쳐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보장 사이에서

2020년 6월 4일(목) 오후 2시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의도

지난 4월 29일,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개정 형법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나이불문,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9세 이상인 경우 처벌합니다.

그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성폭력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집중된 대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해서는 여성계 및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청소년의 성착취·성폭력·학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성적인 보호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오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이슈대응 집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찬성 vs 반대’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는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지, 청소년(또는 비청소년)이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동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비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성착취·성폭력·학대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집담회 속기록을 편집·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이후 ‘동의’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동의’와 성적 권리에 대한 경험과 상상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데 동의해주신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 07. 23.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례

사회 :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문자통역 : 권지영(쉐어타이핑 문자통역사)

기획 의도	3
인사말	7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8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발표 2.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가?	21
권현정(탁틴내일)	
발표 3. 청소년의 관점으로 말하는 '동의'	31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발표 4.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42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표 5. 동의/미동의, 자발/미자발 담론을 넘어	51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토론	66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국가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 가능한 연령을 규정하고 기준 연령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후 2시

사회자 안녕하세요,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얏입니다.

패널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SHARE]의 나영 님, 탁틴내일의 권현정 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님,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민들레 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 님, 이렇게 다섯 분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집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로어 토론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자분들께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채팅방으로 질문을 써주시면 스태프들이 취합해서 저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산 이후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9일에는 제20대 국회에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여서 집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2020년 5월 19일에 이미 법안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3세 미만까지는 행위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까지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하게 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앞으로 사건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1) 그 밖에 2020년 5월 19일 공포된 다양한 법 개정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입장/성명/논평" 게시판에서 '#2020_05_19_오늘부터 #자기촬영물_비동의유포_처벌 #불법촬영물_소지구입저장시청_처벌 #촬영물이용_협박강요_처벌' 게시물 참조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사회자 먼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님께서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나영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같이 논의할 주제들이 여럿 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 발표자에게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제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동의’는 정말 쉽고 당연한 개념인데, 한국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과 관련해서 ‘동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왔고 여전히 현행법 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법 개정이 꼭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동의’를 기준으로 법을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논의와 함께 참고로 읽어보셨으면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밀레나 포포바의 『성적 동의:지금 강조해야 할 것』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보면 ‘동의’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우리가 ‘동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동의’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그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현재 의제강간 연령 상한의 쟁점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전제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법이 시행된 다음인 오늘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상황과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지,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현행법 체계를 보면 성폭력 관련 법에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 관련 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습니다. 이 법 중 어디에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1995년 개정 이전까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유지되었고, 성폭력의 대상은 2013년이 되어서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조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8조 강제추행죄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고, 이를 입증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삽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추행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추행죄 모두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는 '위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에서 다른 조항들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을 오랫동안 강조하면서 입증 요건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력' 역시도, 최근 우리가 계속 판례에서 보다시피, '위력'을 피해자의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강제적인 위력인가, 얼마나 큰 유형력이 수반되었는가, 자꾸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는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레깅스 판결'²⁾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판결에서처럼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침해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촬영된 레깅스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음란한 부호, 문헌'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음


2)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노3606 판결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 전신이 드러나는 불법촬영 영상의 갈무리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판결문에 실어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음란'을 처벌하는 이유가 이 행위의 피해자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의 윤리 도덕을 위해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다루는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의'는 왜 중요할까요? 강간죄가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을 다루는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규범과 도덕을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 과거 '정조에 관한 죄'에서 다뤘던 방식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누군가에 의해 소유된 사람,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 누군가의 보호와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율성을 지닌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 지속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그 행위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법체계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기준으로 하는 법체



동의를 다룬다는 것의 의미

누군가에 의해 소유된 사람 /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 /
누군가의 보호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되는 사람에서
자율권을 지닌 한 개인으로의 인정

가해자-행위 기준에서
피해자-맥락을 기준으로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개인의 구도에서
개인에게 행해진 폭력의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는
국가-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폭력의 개념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호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보다는
누구나 성적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그림1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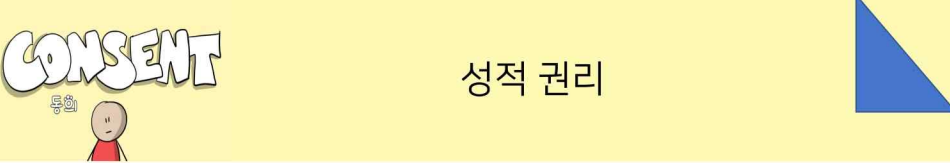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무슨 도구를 이용했느냐? 어떤 신체 부위를 이용했느냐?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루어졌느냐? 합의된 관계였느냐? 평등한 관계였느냐? 그리고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자원과 권력, 기반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느냐?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런 맥락들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동의'의 조건들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성폭력을 '음란한' 행위로서 처벌하던 것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의 맥락으로, 그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을 같이 문제 삼는 구도로 바꿔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폭력의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윤리적 단속을 목적으로 행위를 처벌할 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보호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을 바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보호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모든 종류의 강요, 폭력,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즐길 수 있는 성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몸, 욕구,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는 권리
- 누구와 연애하고 섹스하고 파트너가 될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할 권리
- 성적 정보와 자료, 자원을 이용하고 접근을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
- 자신의 몸과 성 건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에 접근할 권리
-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관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와, 이에 관련된 결정권을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자신의 성 건강과 관련된 의료자원, 의료기관, 의료정보에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도구, 이동권, 의료환경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릴 권리
- 노동하고 자립할 권리


 이러한 성적 권리의 맥락과 이를 보장받을 조건 속에서의 '동의'

그림2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그렇다면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림2>는 성적 권리의 목록입니다. 그 동안 성적 권리 자체가 자세히 이야기되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떠올리는 권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차별·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였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폭력, 차별,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우리가 성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내용이 나오겠죠.

성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욕망을 탐색하며 어떤 행위가 나에게 좋은 행위이고 즐거운 행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욕망과 방식도 존중하며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편견 없이 제공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료적인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성관계, 피임, 임신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에 관해서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과 몸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릴 권리, 노동하고 자립할 권리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동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근 판례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단순히 자기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권리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성적 권리의 조건과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그에 기반한 '동의'라는 개념도 우리 사회의 맥락으로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의'에 관한 쟁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동의 역량이 있는가, 개인을 중심으로 동의 역량의 기준을 따졌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릅니다. 동의의 조건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의 조건을 확장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각의 역할을 문제 삼고,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동의 역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지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지가 아닌, 보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동의'를 다루는 데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이야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밀레나 포포바의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만 중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동의는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존중, 소통, 배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개인'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이 사람의 '동의'를 함께 해석하고 동의에 필요한 자원들을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 여부를 '예스' 또는 '노' 문제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당시 했던 대답이 '예스'인지 '노'인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조건에서 '예스' 또는 '노'라고 이야기한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동의'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간죄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건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그나마도 성기 삽입과 관련된 행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동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작업을 거는' 행위에서부



동의의 원칙

- 동의를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존중, 소통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 Yes or No 만 문제삼지 않는다.
- 동의의 맥락과 조건이 중요하다.
- 개인의 자율권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동의의 대상이다.
- 동의를 매번 확인되어야 한다.
-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그림3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터 여러 가지 신체 접촉과 관련된 행위, 관계 맺는 과정에서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간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의'는 매번 확인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동의'를 기준으로 법을 바꾸고 있는 여러 나라, 특히 캐나다, 호주 사례를 보면 '동의'의 원칙을 점점 강화하면서 '동의'의 맥락이 무엇인지,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에 대한 논의가 삭제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의'를 개인의 역량으로만 바라보면 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 관계에서의 권리를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집, 시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통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면 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통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평소 자기 주변의 친밀한 통제자였던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지거나 그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주체라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고, 그들이 주체로서 한 행위에 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동의 능력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동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사람의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함께 확장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고 성적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동의'의 맥락은 삭제되기 쉽다는 역설이 있는 거죠.

둘째, '동의'가 전제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파트너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거나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지속적 또는 영구적 동의를 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받거나 동의 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셋째, 성소수자 등 비규범적 성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잉성애화³⁾되어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매일 섹스만 하고 그 섹스 자체가 위험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섹스 자체가 문제이지 않듯이 무엇으로 섹스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섹스를 하느냐, 누구와 섹스를 하느냐, 몇 명과 섹스를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3) 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대상 또는 성적 실천만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

발표 1. 무엇이 '동의'를 보장하는가?

그 관계에서 어떠한 동의가 있고 어떻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나 비규범적 성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잉성애화되어 있고 처음부터 문란한 관계, 폭력적인 관계라고 전제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의를 실천하고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삭제돼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청소년의 동의 역량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13세까지 동의 역량이 없다가 이제는 16세까지도 동의 역량이 없게 된 거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17세가 되면 갑자기 판단 능력이 생길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어떤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비청소년이 되면 없던 동의 역량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듯,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의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동의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텐데요, <그림4>에서 보시다시피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집에서 나왔을 때 숙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우리 사회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죠. 통계에 따르면 10대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는 6.8%지만 실제로 피해를 경험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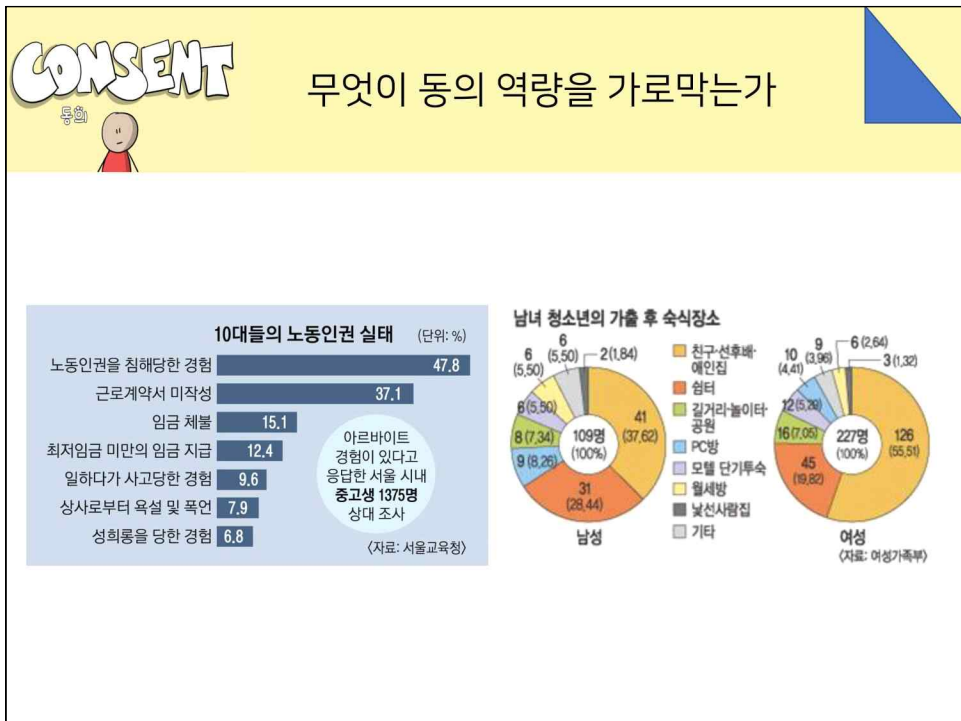


그림4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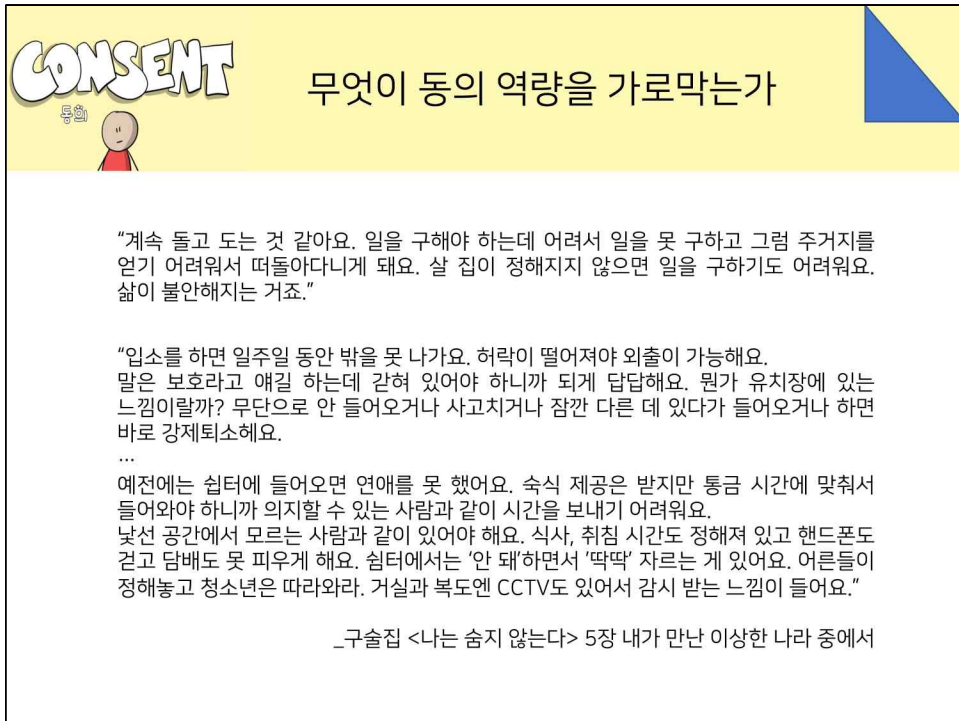


그림5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수 있고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5〉는 제가 『나는 숨지 않는다』라는 구술집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탈가정 청소년이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구술집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가정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집을 꼭 나와야 할 정도로 그게 너한테 중요했느냐’라고 묻거나 아니면 그의 집이 굉장히 폭력적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입증해라’라는 방식으로만 자신에게 자꾸 답변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아야 내 삶이 보장되고 나 스스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상황이 청소년들을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거죠.

어려서 일을 못 구하고, 어려서 주거지를 못 구해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살 집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쉼터에 입소하는데, 쉼터 역시도 통제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외출하려면 허락이 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통제의 조건들 때문에 사실상 쉼터에 있거나 집에 있는 것보다 스스로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있거나 다른 공간, 다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상황인 겁니다.

셰어가 얼마 전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황지성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⁴⁾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가니 사건처럼 이슈화된 사건이 있을 때 장애인의 동의 역량이나 성적 권리를 '없다'라고 간주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쉽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의제 강간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보호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성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 '가장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 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만들 뿐, 존중과 인권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문제들, 더 큰 체계의 문제에는 도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폭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또 하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의 동의 역량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자율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폭력은 우리 일상에 늘 계속 있었습니다. 학교, 집, 시설, 여러 관계에서 나의 주체성을 억누르는 폭력, 나의 권리를 가로막는 폭력, 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 그리고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의지를 장악해가는 폭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부모님과과의 관계, 선생님과과의 관계,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폭력들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불평등한 성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도 그것이 특정한 사건으로 나타나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인정하게 됐을 막판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폭력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 있었던 폭력의 맥락들은 삭제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의'란 어느 한순간에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사람에게 동의 역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도 아니며, 이런 일상적인 폭력의 관계에서 동의를 어떻게 훈련하고 보장할 것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논의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상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참정권'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제야 18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4세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하고 16세부터는 교육감과 지방의회 선거, 18세부터는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서 동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당사자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는 사실상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자원들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들을 통해서 더

4) [정의]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http://srhr.kr/2020/1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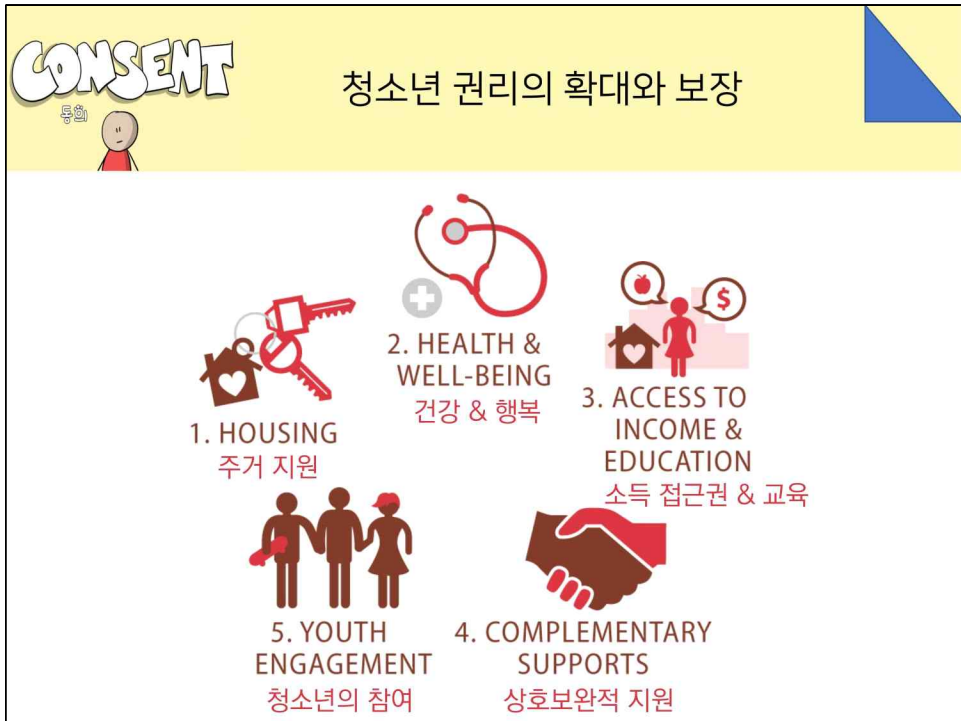


그림6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둘째, 아까 주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6>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 우선 지원 사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은 원 가정 혹은 성인들이 보호해주는 쉼터라는 전제를 넘어서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보장되어야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다른 폭력적인 관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그나마 만들어지는 거겠죠.

셋째, 동의 역량에 관한 쟁점들을 함께 돌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적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폭력과 피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미디어나 편견에 대해서 같이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원, 여러 가지 폭력과 안전, 그리고 자신의 신체, 건강, 여러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같이 이야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의 역량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겠죠.

넷째, '보호'와 '위해 감소'라는 조건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7>을 보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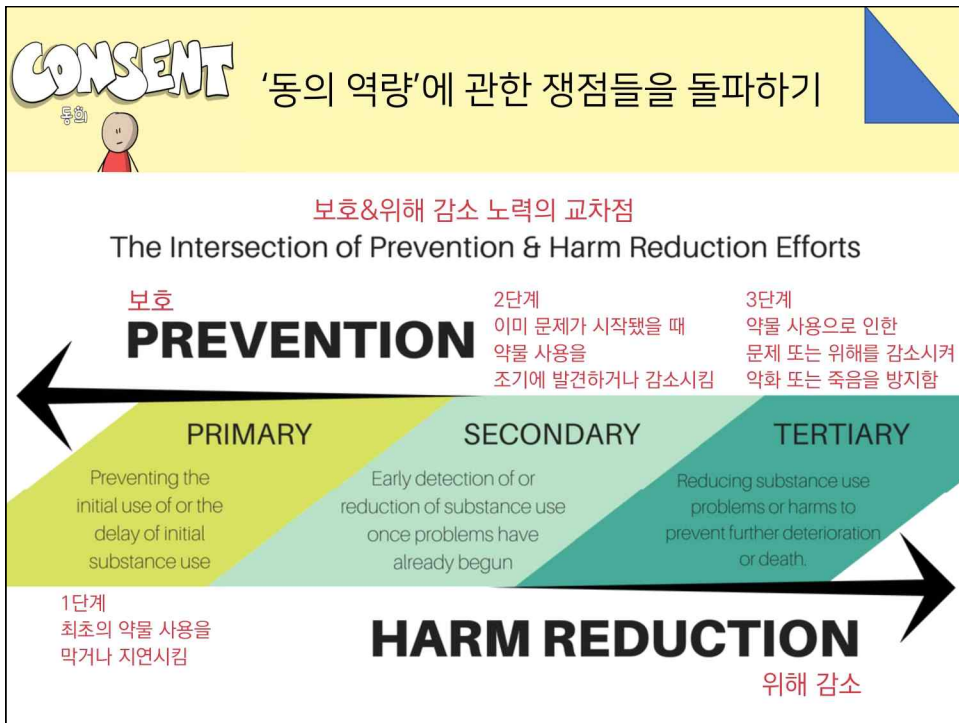


그림7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왼쪽부터 1, 2, 3단계로 표현되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보호'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해 감소'에 가깝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거나 통제한다고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위험과 위해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고민한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과 위해를 만드는 조건을 고려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선해서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미뤄둡니다. 현재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혹시 약물이나 관계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하게 다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만드는 거죠. 무조건 금지와 통제를 하는 '보호'가 아니라 함께 자원을 만들고 사회 정의에 문제 제기하기 위한 '위해 감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로 보면 임신중지와 관련된 동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은 임신중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동의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제삼자의 동의, 배우자의 동의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라는 것입니다.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부모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대신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으로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대신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논의는 다른 조건에서의 동의 역량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꼭 같이 짚고 싶어요.

어떤 분이 채팅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낙태죄와 의제강간죄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서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실제로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하러 왔을 때 성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폭력적인 관계였는지 확인하고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데려오기 힘들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연결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2.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가

권현정(탁틴내일)

사회자 다음은 탁틴내일의 권현정 님께서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현정 소개받은 탁틴내일의 권현정이라고 합니다. 탁틴내일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이고 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들,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과 취약성, 성적 대상화가 아동·청소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의 관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우리사회에서 성별 취약성을 지님
- 성인과 관계에서는 성별 뿐 아니라 연령 차에서 오는 취약성을 지님
 - 성인에 의한 그루밍 수단들
 - 아동·청소년은 법적 사회적으로 부여된 권리, 능력에 있어 성인에 비해 제한적.
- 아동·청소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생존, 보호, 표현의 자유, 발달, 참여, 교육, 건강권의 권리 등)가 있고 그것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사회와 성인의 책임
- 성착취, 성폭력에 대한 구분없이 피해자로 지원되어야 한다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는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아동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사)탁틴내일

그림8 © 권현정(탁틴내일)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동·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떡볶이집에서,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거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인 여성과 똑같이, 오히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쉽게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대놓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눈으로 훑어보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는 대놓고 성희롱을 하거나 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들이 쉽게 성적 대상화를 하고 가해 행동을 한다고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어요.

여성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관계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에서 비롯된 불평등도 있다고 봅니다. 성인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⁵⁾을 현장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성인은 그루밍을 할 수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일단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월 사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수단으로 그루밍이 많이 이뤄집니다. 또는 성인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지적인 자산도 성인에게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그루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폭력 가해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정서적으로 그루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은 성인들이 물질적, 정서적 수단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을 그루밍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현장에서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⁶⁾,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폭력을 지원할 때나 법 개정을 할 때도 반영되어야 하겠죠.

아동·청소년은 「UN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그걸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회와 성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에는 '보호'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사실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는 면이 많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뜻하고, 성장 과정에 있는

5) 특별한 목적이나 행동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거나 교육하는 과정을 '그루밍' 또는 '길들이기'라고 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① 피해자의 취약성을 파악해 피해자를 고르고, ②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③ 피해자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④ 피해자를 고립시킨 후, ⑤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⑥ 피해자를 희유, 비난, 협박해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6)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사용자, 친권자, 학교장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직인허증이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의 관점

- UN아동권리협약(1990년 발효, 193개국 가입, 한국은 1991년에 가입)
 -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
 - 제34조에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
-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2007 란사로테 협약)
 - 그루밍 문제를 국제법에서 최초로 구현
 - 제3조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를 성착취 또는 학대의 대상인 아동으로 정의



그림9 © 권현정(탁틴내일)

아동·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착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성착취'는 교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점점 성착취와 성폭력이 구분 없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예를 들면 집에 있기 어려워서 밖에 나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잠잘 곳을 얻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성폭력과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착취, 성매매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여전히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일단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아동 인권 감수성이 같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인권 감수성이 뭔지는 저희도 딱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문제를 의미 있게 다뤘다고 여겨

지는 2007년 「란사로테 협약」에서는 ‘그루밍’을 국제법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그루밍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에 따르면, 성인 대상 성폭력 형사법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인 것에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형사법의 보호법익은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이라고 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라볼 때 보통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로 나누잖아요.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 즉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서는 <그림10>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13세 미만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13세부터 20세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는 20세까지만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20대 초반까지도 피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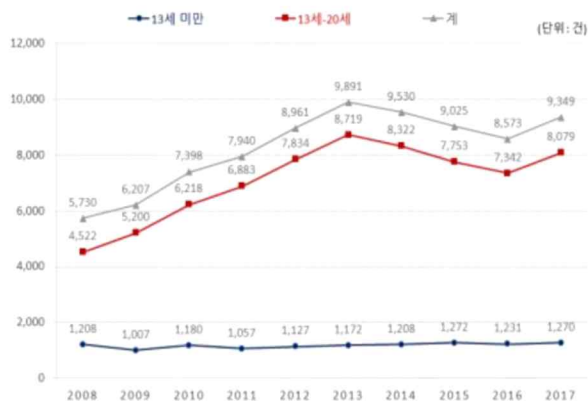


그림 II-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추이(2008년~2017년)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

* 출처: 이정민, 이수정(2019),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탁틴내일

그림10 © 권현정(탁틴내일)

별표 2.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가 시작되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연령대는 14세에서 16세입니다. 가출 당일에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23.8%에 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하루 최대 성매매 경험 횟수는 평균 2.7회, 많게는 무려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이처럼 많은 성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루밍 수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게임머니·모바일 쿠폰 선물, 용돈 주기, 음식·숙소 제공’ 같은 물질적 자원부터 ‘진로, 학교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성적 호기심 이용’ 같은 지적 자원, ‘대화 상대 되기, 관심, 칭찬, 인정’이나 ‘사귀는 사이로 만들기’ 같은 정서적 자원까지 다양한 자원이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회적 자원이든 개인적 자원이든 자원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또래 간 사건보다 심하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성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해 청소년은 사랑으로 인식해서 신고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신고했는데 사실 피해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오빠밖에 없다, 사랑하니까 처벌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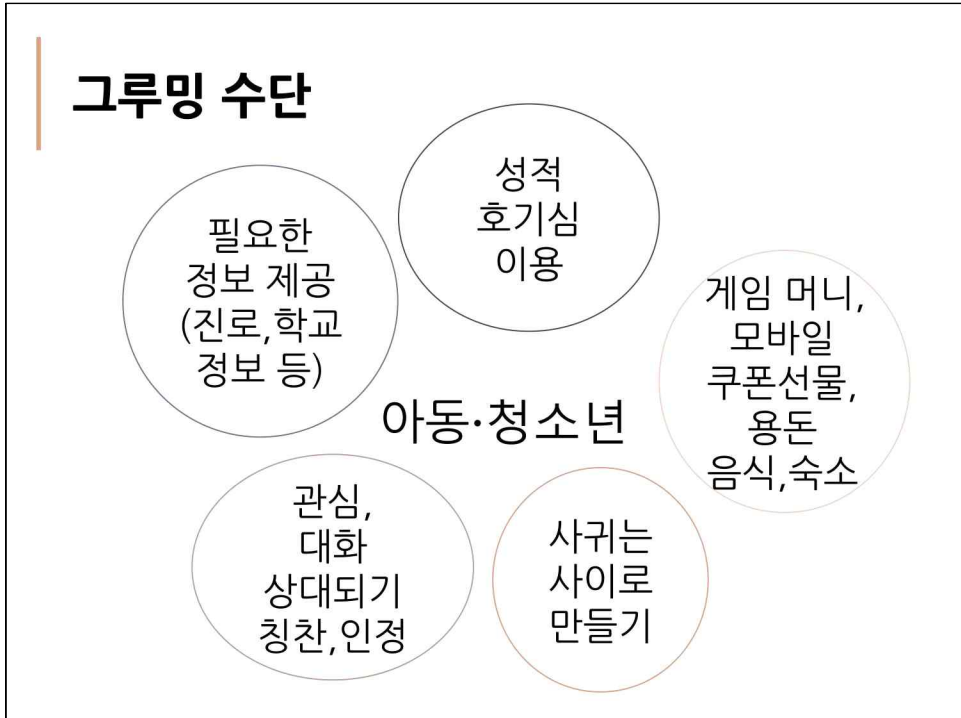


그림11 © 권현정(탁틴내일)

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막상 피해 사실을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성적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제삼자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이용당하는 것인데 당사자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둘째, 명백히 성 발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피해 청소년이 원치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제강간죄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둔 법 조항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의제강간죄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보다는 '동의만 구하면 13세 이상인 청소년과는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가 다수 대 다수의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일 대 다수의 성관계를 제안해서 실제로 하는 경험을 어떤 청소년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이 안 되죠. 특수강간으로 입건됐다가 불기소되는 사건도 있어요. 명백히 성 발달에 해가 되는 행동임에도 피해자가 '싫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동의'로 해석되면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관계 형성·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맞춰준 언행 때문에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넷째, 성적 호기심으로 한 언행 때문에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은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⁷⁾ 피해자는 관계 형성이나 관계 지속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성적 호기심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언행 때문에 성폭력까지도 동의한 것으로 해석돼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전후 관계도 봐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요즘은 '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지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안타깝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대로, 기준으로, 제대로 적용된다면 의제강간죄가 없어져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처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로 인해서 예전에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를 이제는 처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그루밍 성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이처럼 관계를 만 들어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반응은 참 스펙트럼이 넓어요. 시간이 지나

7) 연예기획사 대표인 가해자가 15세 청소년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력을 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가출하게 해 가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건. 피해자가 출산 직후 가해자를 신고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내용을 근거로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 후유증

-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진정한 신뢰가 아닌 이용하려는 의도에서이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기 때문이다.
- 피해자들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피해자는 그루밍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삶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사)탁틴내일

그림12 © 권현정(탁틴내일)

며 '내가 이용당했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해자를 사랑한다, 그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처벌되는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그루밍 성폭력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큼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걸 알고 싶다'예요.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봅니다. 가해자는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나를 정말 사랑했나?'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심리적인 혼란스러움은, 상담 과정에서 극복이 되기는 하지만, 극복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한다든지 소문이 난다든지 학업이 중단된다든지 또는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서 성매매로 유입된다든지 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강간죄의 기준이 되는 '동의'를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영 님도 소개해주신 밀레나 포포바의 책 『성적 동의:지금 강조해야 할 것』을 보면

강간죄 판단기준 '동의'와 가해자, 피해자의 나이

- 동의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구조, 문화, 복잡한 권력작용이 얹힌 개념이자 실천(밀레나 포포바,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자유롭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미국 캘리포니아 주 강간죄 법의 '동시에 대한 정의')
- 성인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나이 차이는 동의의 조건인 대등함을 지니기 어렵다



그림13 © 권현정(탁틴내일)

“동의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구조, 문화, 복잡한 권력작용이 얹힌 개념이자 실천”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정말 동의하고, 여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나이와 성별이라는 취약성이 중첩되어 여성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관계는 특정한 나이 차이로 인해 동의의 조건인 대등함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제강간죄는 피해자는 16세 미만, 가해자는 19세 이상으로 규정해 최소 4살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4살에서 6살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동의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여야 성립하는데 특정한 나이 차이는 대등함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나이가 위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의제강간죄는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를 법제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의제강간죄의 역사를 찾아봤는데, 세계적으로 의제강간죄가 생긴 지 800년이 됐다고 해요. 연령 기준을 12세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13세로 상향되고, 19세기 말에는 대부분 16세로 상향되고, 현재는 180개 국가 중 16세가 73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8세가 40개국, 14세가 24개국 순서로

발표 2.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페인은 2013년에 16세로, 프랑스는 2018년에 15세로 기준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산업화 등 아동·청소년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제강간 연령도 올라갔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정말 광범위하게 성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이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이 성인에 의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착취를 예방하고 처벌의 공백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루밍 성폭력은 아예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올라가면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성착취 피해도 성매매가 아닌 의제강간죄로 처벌하게 됐습니다. 형량도 다르잖아요. 형량도 강화됐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받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도 여전히 있지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16세 미만 의제강간·추행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폭행·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의제강간·추행죄로 처벌함으로써 성폭력 가해 사실을 축소해서 평가하고 가중처벌해야 할 성폭력의 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의제강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세인 줄 몰랐다, 18세인 줄 알았다'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연령 확인 책임을 주어야 의제강간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의 성폭력, 성착취 피해에 대해서도 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거나 교육, 업무, 고용, 종교, 의료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소개해드린 「UN아동권리협약」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 성착취 예방을 위해 그루밍을 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분으로 범죄화할 필요도 있지만, 각 조직의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의 경우 학교 밖에서 일 대 일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든지, 상담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루밍을 금지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대화에 참여시킬 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개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16세, 19세, 아까 말씀드린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줄어들고 아동·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래 간 성폭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 입법·개정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걸 법보다는 교육,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 305조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⁸⁾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었어요. 앞으로 이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발표 3.

청소년의 관점으로 말하는 '동의'

- '일탈'을 넘어 '일상'으로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회자 다음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님이 “청소년의 관점으로 말하는 '동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지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양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성과 연애를 경험하는지, 그 과정에서 위험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의 권리 보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없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엄벌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만 귀결되는 것 같아서요. 오랫동안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위티'라는 단체에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이후에 함께 했던 논의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관점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에 “‘일탈’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어요.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방식은 <그림14>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등의 말로 처음 성을 접하게 되고, 마치 성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것,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성 경험을 말할 때 '발랑 까진 애'라는 취급을 받거나 학교 내에서 고립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청소년 중심의 담론 속에서 여성 청소년은 성적 대상화와 착취를 경험합니다. '야동'이라 불리는 포르노그래피에서 '교복물'을 찾기 어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에 '콘돔'이라고 치면 성인인증을 하라고 뜨는데, 한편으로 구글에 '여고생'이라고 쳐도 성인인증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너무 성적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당사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성 청소년이 '성적으로 무지하고 순결한 존재'라는 인식이 여성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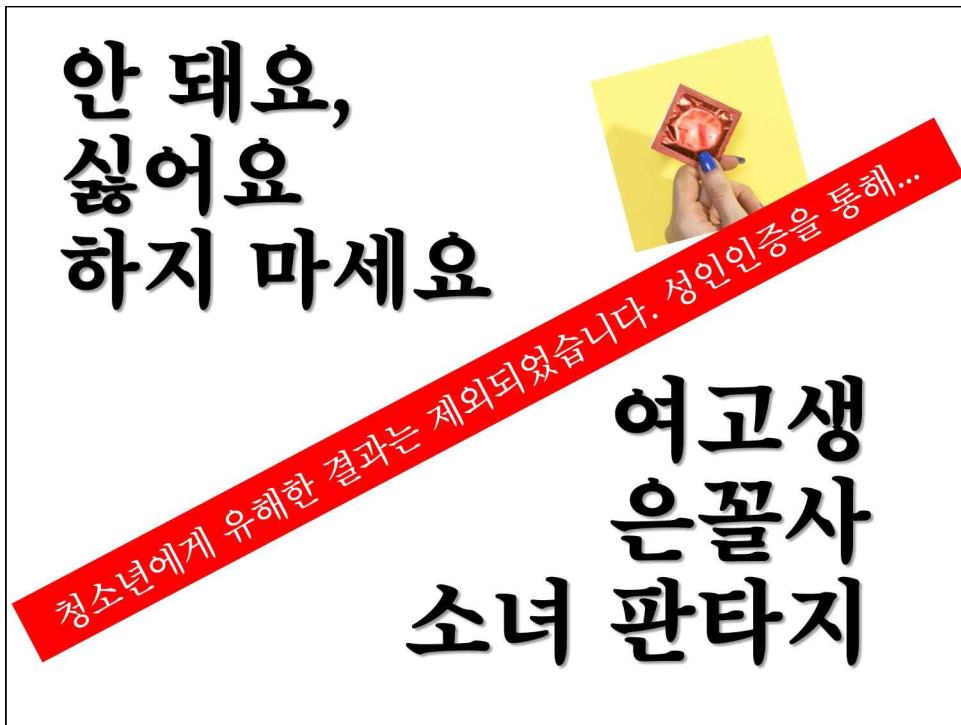


그림14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는 소위 '아다9)'라고 불리는 섹스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이미지나, '은꼴사'¹⁰⁾처럼 보일 듯 말 듯 한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어떨 때는 '소녀'라는 이미지가 '금기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성을 함락한다'라는 의미로 소비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이 성적으로 무지하다는 편견은 오히려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은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되지만, 스스로의 욕망을 말할 수는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남성 청소년 중심의 성 담론 속에서 여성 청소년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 사랑,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흔히 성을 '19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미 무수히 많은 청소년이 성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988년도에도 10대 청소년의 60%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TV에서는 남성 아이돌이 '나 청소년기에 야동 봤다'라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쉽게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회가 청소년에게 성적 권리와 성적 실천을 금지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성장

9) 새롭다, 상상하다 라는 뜻의 일본어 '아타라시이(あたらしい)'에서 유래한 은어.

10) '은근히 끌리는 사진'의 줄임말.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것

연애하는 것	사생활을 가지는 것
섹스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임신하는 것	생애주기를 벗어나는 것
출산하는 것	독립된 인격으로 사는 것

그림15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하는 과정의 존재, 미완의 존재, 아직은 이 사회의 시민이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학생, 또는 누군가의 자녀로만 여기는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쉽게 일탈로 낙인찍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연애, 섹스, 임신, 출산 등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성에 대한 권리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입시나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 바깥에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이 얼마나 시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사실 청소년이 성적인 존재임을 이미 뻔히 알고 있지만, 성을 '19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성적인 존재인 청소년들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비상구 계단에서 숨어서 섹스를 하는 방식으로 성적 실천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적으로 무지할 것이라는 '아이다움'에 대한 통념을 깨야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상품화에 저항하는 일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다움'에 저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희고 고운 피부, 밝고 순종적인 태도, 무해하고 무지한 표정 등 '성적으로 무지하고 순결함'이라는 이미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이기도 해요.

많은 분이 이번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만을 제약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나 성적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성인은 미성년자를 연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성인은 또래와의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자이다' 이런 말이 트위터, SNS 내에서 통용되곤 하죠.

그런데 사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가 폭력적인 관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 왜 그런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현정 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청소년은 청소년이 가질 수 없는 자원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자원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자원이 없으니 격리돼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잘 동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성적 실천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이뤄진 후 위티는 비청소년과 만나거나 성적 관계를 맺었던 많은 여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윤달이라는 활동가는 "위계를 만드는 요소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위계 때문에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위계를 부수어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관계에는 위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계를 끊임없이 고려하며 말을 걸고 어떻게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사회에서도 다양한 위계 속에 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성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티 내부에서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 덕분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상황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더 생기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했습니다.¹¹⁾

청소년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고 청소년의 행위성을 제한하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보다는

11) [논평/입장] 일탈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n번방 방지법' 이후의 과제를 제안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https://wetee.kr/24/?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782850&t=board&category=5Is3hww02s>

의제강간연령 상향에 가려진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



의제강간연령 덕분에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더욱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게 될 것만 같다. 의제강간연령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위계를 공고화하고 청소년을 무력한 존재로 위치시킨다. 법무부가 해야 하는 건 누구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지 판별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왜 침해당하는지 다양한 위계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성적 동의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의제강간연령 상향에 가려진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 / 윤달

그림16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통해서 성적 동의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동의가 한순간의 '예스' 또는 '노'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인 환경 자체가 성적 동의에 포함돼서 해석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혐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는 '철경철경'이고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그 관계가 일방적인 폭력의 관계로만 해석됐을 때 여성 청소년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위티는 청소년의 성과 사랑이 정상성 바깥으로 여겨지고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위계가 성적 관계에서만 고려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수한 관계에서 청소년은 비청소년과의 위계를 경험합니다. 이 위계 차이를 일상적으로 좁혀야만 연애나 성적 관계에서도 위계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동료 중 누군가는 비청소년과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청소년과 연애를 하면서 모텔에 출입하거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서 자유로웠다는 이야기, 자신의 집에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파트너의 집에서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동료는 비청

소년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게 되면서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고민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생활을 의존하지 않고 비청소년과 연애하는 경우에는 관계에서 겪는 위험이 더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가들끼리 모인 커뮤니티 내에서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에 대해 합의를 하고 만났던 관계에서는, 물론 그 관계에서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나 생활의 선택권 차이로 인한 위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서로가 가진 위계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관계를 피해로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청소년 동료들은 비청소년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청소년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실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월수입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데이트 비용은 더치페이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든지, 생활에 있어서 나는 12시가 통금인데 상대방은 12시에 놀러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위계가 있는 거죠. 사실 저 역시도 청소년기에 비청소년과 연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건 이런 한계를 가지는 삶이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인

“청소년의 성과 사랑은 왜 정상성 바깥의 것으로 여겨질까?”

“청소년은 왜 비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 취약해지나?”

이는 연애에 한정된 문제인가?”

“청소년-비청소년간의 연애에 대한 혐오정서는 청소년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자

그림17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저는 지워진 존재에 대한 회복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정을 벗어났을 때 청소년은 불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성이 박탈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주체성을 조금이나마 획득할 수 있는 경로로 비청소년과의 연애나 만남을 욕망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청소년의 폭력에 의존해야 하는 이 지점을 깨지 않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청소년의 폭력은 여전히 견고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미비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처벌, 낙인으로만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를 다룬다면 차별과 착취는 더욱 심해질 거예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를 혐오하는 정서는 청소년의 연애나 성적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문화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정상적인 생애주기 속에서 성과 연애를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전유물로 간주해왔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성과 연애에 대해 자기 언어를 가지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청소년의 연애는 학생들 간의 풋풋한 연애라는 담론이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를 혐오하는 문화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가 착취와 의존을 넘어서 다양한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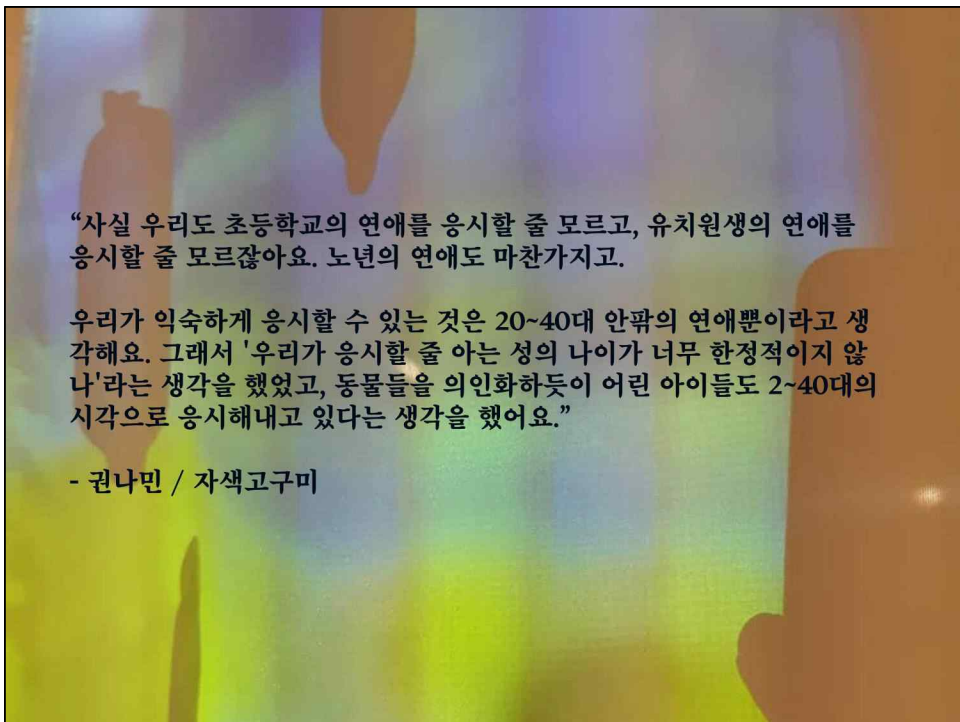


그림18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위티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에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 질문을 던졌습니다.¹²⁾ 이것은 여성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할 때 왜 가정이나 학교가 아닌 SNS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졌는가 질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섹스가 낙인이 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면서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착취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여성 청소년이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야 했던 현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기저에는 청소년이 인간으로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에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을 벗어났을 때 다른 선택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은 바로 학교나 가정에서 통제와 폭력을 경험하고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학교 밖 또는 집 밖에서 장기간 머문 청소년들은 「소년법」상 ‘우범소년’ 조항이 적용돼서 처벌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¹³⁾ 쉼터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고 쉼터를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라는 책을 보면 “폭력을 견디는 것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 10대 가출 여성이 처한 절망적 현실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대상 성착취 역시 폭력적인 공간에서 버티지 않으면 살아갈 자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자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10시 이후에는 PC방도, 찜질방도 갈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비청소년과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19>는 몇 해 전 일다에 기고된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되니까?’라는 에세이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필자는 자신이 청소년으로서 비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던 이유를 ‘아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 구조,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피해자다움’이라는 또 다른 네모에 자신을 맞출 것을 요구받습니다.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12) [논평/입장]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https://wetee.kr/24/?bmode=view&idx=3595608&back_url&t=board&page=%EC%99%9C&fbclid=IwAR1CfazflvEVieNriWbUbRLoplw7v1_cj3iSCWcTVcVgk_NmihfLIP5NPow

13)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인 소년이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범소년’으로 보고 보호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에게는 은밀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때론 '아이'로 취급받는 것보다는 '성적 대상' 즉 '여자'로 취급받는 게 더 인간 취급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성관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학교 청소년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의제강간연령 상향하면 해결되니까? / 일다(익명)

그림19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매우 많고, 그 가능성은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이 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피해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청소년다웠는지' 증명해야 하는 한계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여야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피해로만 귀결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복합적인 경험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여성 청소년분들과 같이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한 성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실 나도 대가를 받았다'라거나 '성착취를 통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나 역시 가해자여서 법적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여성 청소년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으니,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아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¹⁴⁾

청소년의 성적 실천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족쇄를 걷어내고 복잡다단한 현실의 변화를

14)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조치 등 사실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청소년은 성적 동의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믿는 법안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들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성적 동의를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취약한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동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성숙한 사람만 '예스' 또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연장선에서 고민되어야 합니다. 정상성 바깥에 있는 이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결단력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능력 개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장애 여부로 ‘피해자다움’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개념으로 ‘동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동의’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듭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모든 곳이 ‘노키즈존’인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비청소년 중심의 언어로 맞춰져 있고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는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 그저 ‘청소년은 동의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호가 아닌 통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의붓아버지가 6살 딸을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빠가 올라가서 넣었다 뺐다 했어요. 아팠어요.”라고 증언했음에도 충분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존에 피해 여부를 판단해온 관행에 따라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법제도는 너무 부족해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아동·청소년이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연애했다가 부모에게 들리면 부모가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의 근거로 그동안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몇 개월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수많은 사례가 이야기되는데요, 앞으로는 16세 몇 개월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이 더 높았으면 16세 몇 개월인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계속 나이를 높여가는 방식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구조를 이해하고,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폭력

가이드라인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라는 주제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 청소년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 착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여성 청소년들의 존재를 그냥 '피해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눌러버리는 논의가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이 '성을 접하면 피해자가 될 거야'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논의가 아니라, 청소년이 일상으로서 성을 실천하고 일상에서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각자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판단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4.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회자 지금까지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 앞으로 두 분의 발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의 민들레님께서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로 처벌하고 있잖아요.¹⁵⁾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법은 ‘동의’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오늘 ‘동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저에게 제목을 정해 주셨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이 제목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실제 사례나 지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담론 중심으로 이야기 혹은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가 있는 성적 행동을 하고 싶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성적 행동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성적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도 나와 같은 성적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적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성적 권리를 인권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평등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조건 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평등권을 침해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모두가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보다 가중처벌하고,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등한 인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존재인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과 관련해 성적 안전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 권리입니다. 인권으로서 성적 권리는 성적 존재인 인간 모두가 동등하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평등권이 그랬듯이 성적 권리도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인권의 가치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적 권리의 주체임이 부정되거나 통제되는,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 유예되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장애인, 성적 욕망을 조절할 수 없다고 낙인찍힌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쉽게 부정되거나 통제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성적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당연한 말조차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군형법」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하는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때 행위 주체 간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¹⁶⁾

나이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거나 유예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으로부터 불쾌감, 조롱, 비난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적 권리는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정당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혹은 그들이 성적 행위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밝혔을 때 상대방에게 존중되고 수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성적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동의 여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적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상호 간 권리 주체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동의'를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성적 권리의 주체임에도 이를 부정당하거나 통제되고 유예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존재들에게 성적 권리와 동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간 '여성의 노는 예스다'라는 잘못된 통념에 맞서서 '노 민즈 노'라는 구호가 있었습

16) 「군형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다른 군인 또는 준군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보다 가중처벌하는데, 이와 별도로 제정된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규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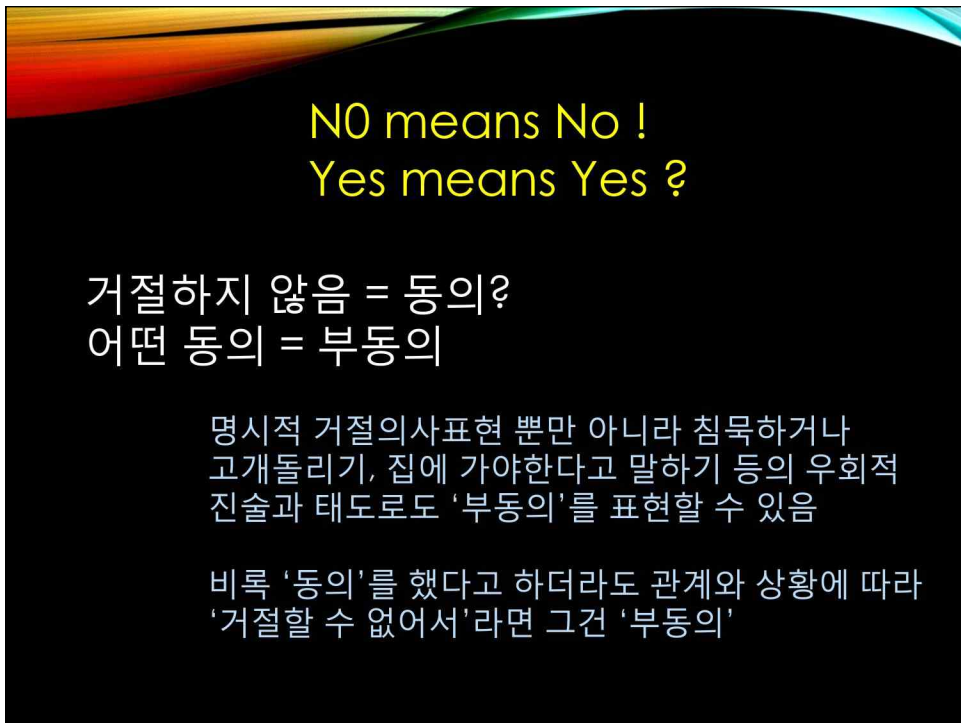


그림20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니다. 그렇다면 '예스'의 뜻은 모두 진정한 '예스'일까요? 거절하지 않았으면 동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당한가요? 혹은 동의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진정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부동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침묵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우회적인 진술과 태도로도 부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관계나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없어서'라면 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맥락 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예스'도 '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구호도 필요하지만 '동의'가 가지는 의미까지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를 쉽게 처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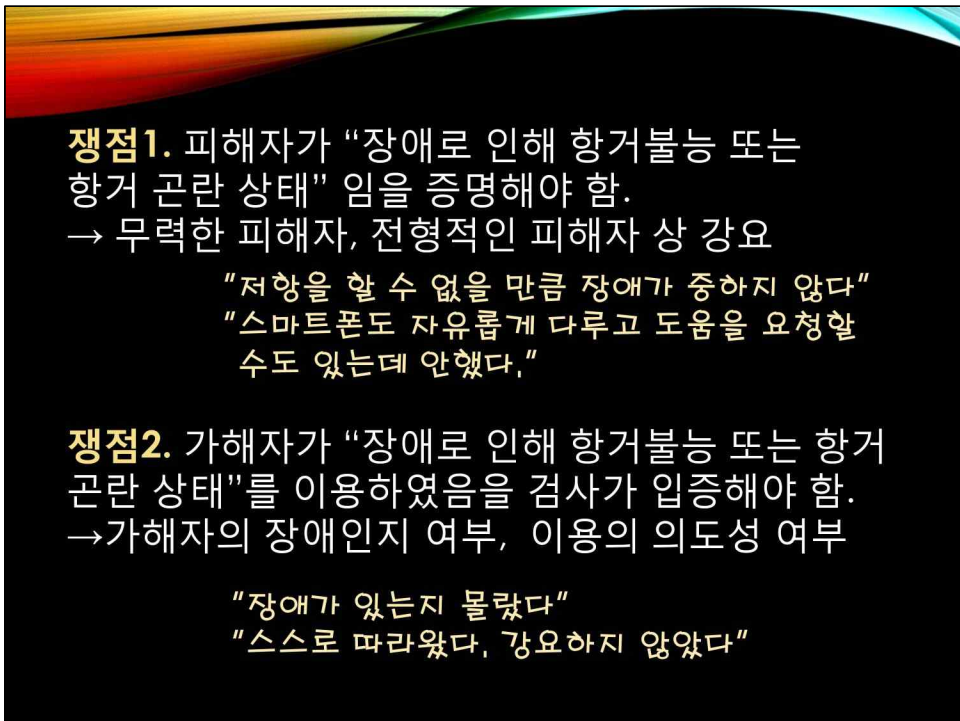
실제로 수많은 장애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협박이 명백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행태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

도 충분히 제압되거나 저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시도했는지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보면, 이 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규명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곤란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장애 자체로 인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는지만 집중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는 이유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한 판단입니다. 일상생활기술은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거나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별개의 영역이니까요.

결국, 피해자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맞춰 피해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쟁점1.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임을 증명해야 함.
→ 무력한 피해자, 전형적인 피해자 상 강요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중하지 않다”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다루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안했다.”

쟁점2. 가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함.
→가해자의 장애인지 여부, 이용의 의도성 여부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
“스스로 따라왔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림21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둘째,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임을 가해자가 '이용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을 인지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해서 별다른 강제력이 없어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라거나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실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가 피해자의 장애나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해자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밝히고 가해자의 고의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너무 쉽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결국, 장애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누구나 장애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무능한 '진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어떠한 저항도 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진짜 이유는 장애인의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과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낮은 인권 의식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이유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과
낮은 인권 의식의 문제**

그림22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인식은 장애인을 보호받는 위치로만 한정하면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길 요구합니다. 그런 존재는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저항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쉬운 존재'가 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차별과 통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자신도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인식하더라도 자신이 저항해서 폭력을 멈춰본 경험보다는 더 심한 폭력으로 제압된 경험이 많다 보면 저항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나 자원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제한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교육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제한적이고 통제된 사회관계 속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폭력이나 차별은 장기간 은폐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피해자의 유일한 물적, 인적 자원일 경우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처럼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회적 차별, 자원과 관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삶의 맥락을 삭제해버리면, 오로지 '피해자의 장애가 저항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인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몰이해나 폭력이 작동하면, 끊임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항거 가능성만을 문제 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의 이유를 오로지 피해자의 결함으로 돌리는 것이고, 범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해자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29일에는 제20대 국회가 정부가 발의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을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22년간 반성폭력 운동과 장애 여성 인권 운동을 해온 단체로서 이번에 통과된 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5월 초에 논평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¹⁷⁾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서 특히 의제강간죄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현행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점에 대하여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논평]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의 역할을 다짐한다, 장애여성공감, <https://wde.or.kr/6200-2/>

기본적으로 저는 이 법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적 권리에 대한 보호주의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법이죠.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는 자신의 몸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곧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이로 인한 위계 관계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권리가 아닌 개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며, '동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성폭력을 무능한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문제를 간과하게 하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조건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호해야 해.'라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혹은 피해자의 무능함에 돌립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의 근거를 나이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책임을 일부 가해자 개인의 악랄함이나 피해자의 무능함 또는 미성숙함으로 돌리는 태도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면서 피해자에게만 입증의 책임을 물어 온 사법부의 숨방망이 처벌은 가해자 스스로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믿게 했습니다.

국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2015년에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 도리어 성불평등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학교 성교육의 실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과 중복추산 26만 명의 공범을 양산했다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지 않고 있고 학교 성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해서 정쟁에 매몰돼 있던 시간 동안 수많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막상 N번방 사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제야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인권 운동 진영에서 논의해온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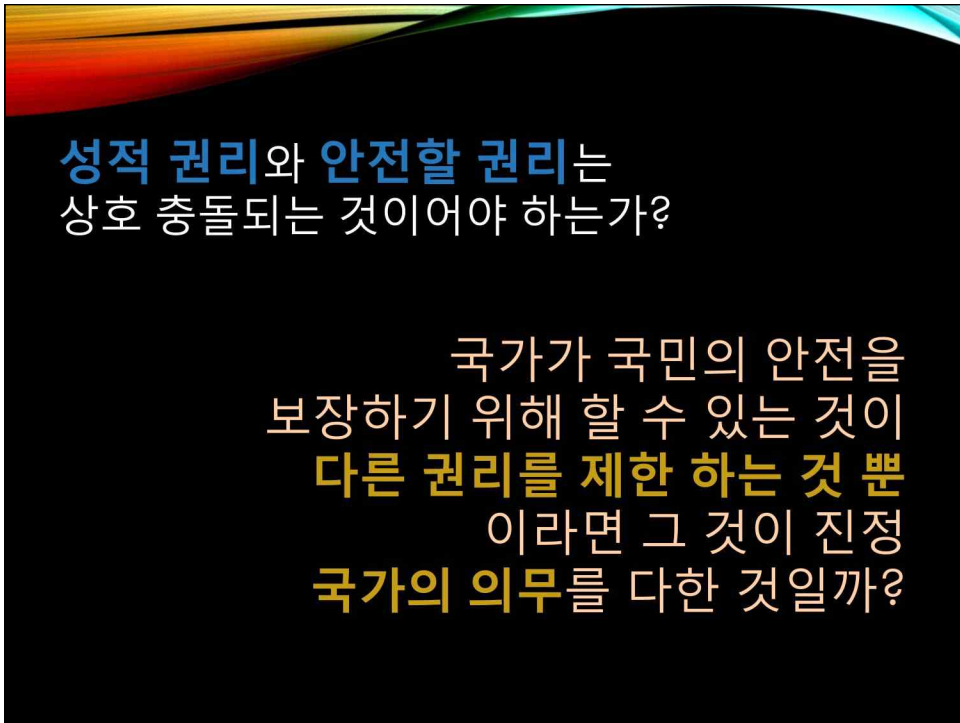


그림23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정과 맥락은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정부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사법부, 정부,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는가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상호 충돌되어야 하는 건가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라는 입법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 자격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것뿐이라면 진정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어떤 위치가 되기를 강요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강간죄 구성 요건에 ‘동의’가 포함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만 집중하면서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권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와 피해자의 위치성으로 인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끊임없이 ‘장애’로 인해 동의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듯 ‘나이’로 인해 동의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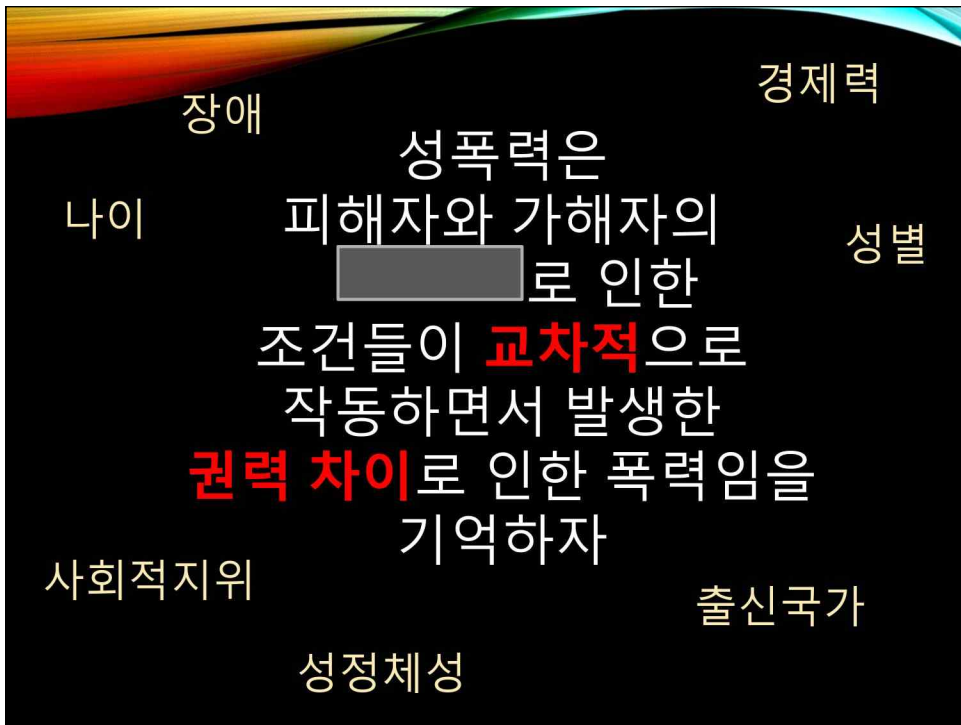


그림24 ©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은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 여부 또는 동의 능력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장애, 나이, 성별, 성정체성, 경제력, 사회적 지위, 혹은 출신 국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교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폭력,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 권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1:1 평등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방이 거절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동의'라는 양상한 단어만으로는 성폭력을 처벌할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에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동의 여부를 질문받지 않는 존재들과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기 위함이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직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의 가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지, '동의' 자체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5.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담론을 넘어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자 다음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님께서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담론을 넘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나 안녕하세요? 저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나입니다. 저를 왜 섭외했는지 따로 소개해주지 않으셨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저한테 요청한 발표 내용은 성폭력이나 의제강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동의’나 ‘자발성’이라는 이야기가 단 순해졌을 때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던 현장이 성매매 현장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는 의제강간 이야기는 없거든요?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이라는 개념과 ‘나이’라는 권력 관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더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은 과도기적인 수단이자 전략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합의한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수단으로 많이 보게 돼요.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됐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16세 미만에게는 무기가 하나 더 생겼구나, 어떤 무기로 쓰일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갈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무기가 16세 미만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상에게는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이미 나이를 기준으로 한 보호법 체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질문할 필요는 없나? 「아청법」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혹은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같이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청법」 체계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은 그동안 다른 주장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거든요.

동의, 자발, 선택이라는 정치가 참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성매매 현장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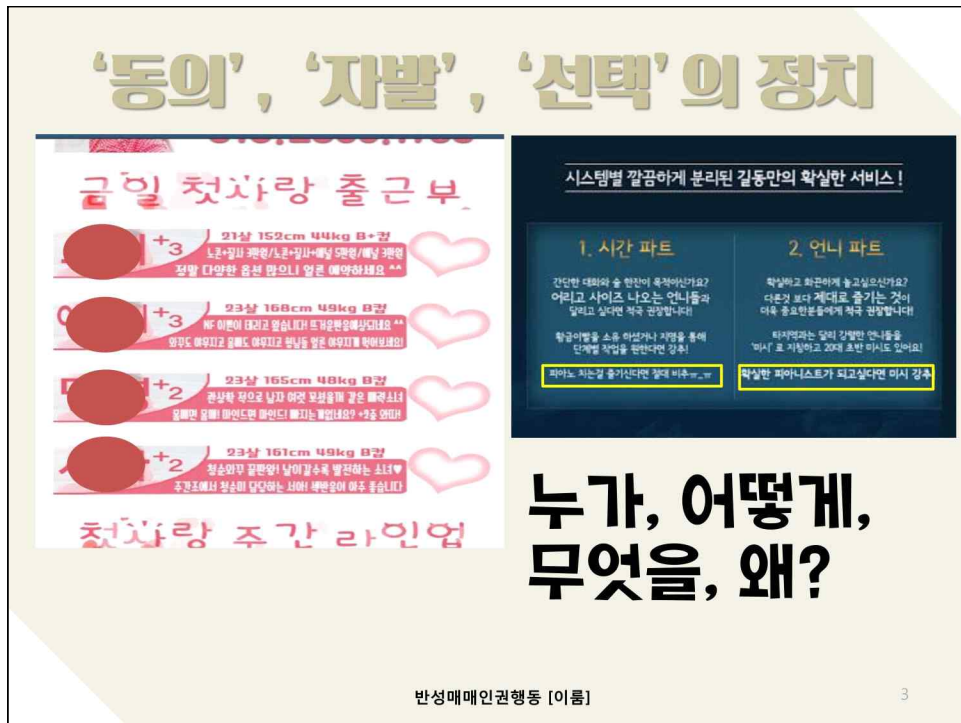


그림25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림25>에 있는 이미지 중 왼쪽 '첫사랑 출근부'부터 볼게요. 성매매 산업 중 오피스텔이라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종은 유흥업소, 룸살롱과는 다르게 남성들이 여성을 줄 세워서 선택하는 과정이 없는 대신 매일매일 누가 출근했는지 온라인에 출근부가 올라오고 온라인을 매개로 홍보합니다. 그중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예명 옆에 숫자가 등급인데 '+8'까지도 있고, 나이, 신체사이즈, 그리고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콘+질싸', 즉 콘돔을 쓰지 않고 질내사정을 하는 행위를 가능한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을 더 지불한다면 '동의'하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로서, 상품으로서. 애널섹스도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콘'이나 '질싸'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누구는 콘돔을 쓰지 않고 질내사정을 하는 행위에 '동의'하며 '돈을 더 지불한다면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누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림25> 오른쪽 이미지는 업소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사보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았는데 룸살롱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보면 '시간 파트'가 있고, '언니 파트'가 있어

요. ‘시간 파트’는 ‘피아노 치는 걸 즐기신다면 절대 비추_{π_π}’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피아노를 친다’라는 은어는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 침범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언니 파트’는 ‘확실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미시 강추’ 오라고 쓰여 있어요. ‘시간 파트’에는 신체적인 접촉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이 일하고 ‘언니 파트’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침범에 동의했다고 여겨지는 여성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떻게, 더 많은 신체적인 침범에 동의하게 되는가? 혹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의/비동의’라는 담론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정치가 납작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분화되어 있는 논의 속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어디에서부터 동의하지 않았는지, 화폐가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한 현실에서는 분간하기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동의’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나이’도 질문하게 되죠. 나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 여성 인권과 여성주의적 가치를 고민하는 우리는 왜 ‘나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을까요? <그림26>은 나이에 대한 성매수 시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여성이 ‘저 미성년자예요’라고 말했을 때 성매수 시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상관없다” 오히려 돈을 더 줘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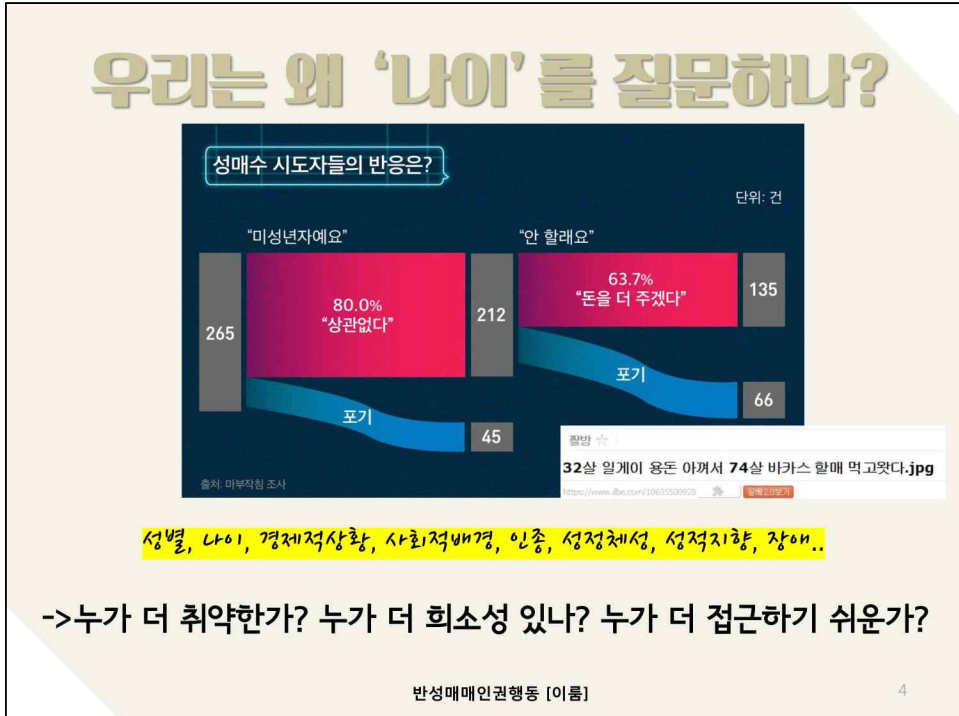


그림26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접근성이 나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취약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릴 때만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림26>에 캡처해서 붙인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바카스 할매 먹고왔다.jpg'라는 커뮤니티 게시글 제목입니다. 2018년에 패륜이다 뭐다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성매매 산업 현장에서는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이들이 상품으로 과잉성애화된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질문할 때, '어린 나이, 미성년자, 보호받아야 한다, 안전해야 한다'라고 접근하기 위한 질문보다는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나이, 혹은 어떤 나이대가 어떻게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민은 당연히 성별,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 인종, 성정체성 등 여러 가지 다른 권력의 축들과 함께 고민하는 맥락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덧붙여야 할 질문은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누가 더 취약한가?'입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 '그래서 누가 더 접근하기 쉬운가?'도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나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심이죠. 아동·청소년들의 위험을 강조하고,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다들 화들짝 놀라서 '사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말세다'라고 반응합니다. 저는 이번 N번방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기도 했어요. '법이란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만들어지는 법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매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조건만남이 이슈화되면서 '채팅앱이 문제다'라는 말이 돌았죠. 정말 문제거든요? 운동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채팅앱 문제를 가시화해온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10대 윤락 절반이 여중생/대부분 유흥업소 자발취업...초등생도 있어", "'보도방'업자 처벌 강화/최고 징역 10년 구형키로" 98년도, 99년도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그때는 조건만남이나 채팅앱은 없었죠. 아동·청소년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해도 됐거든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죠. 이런 인식이 실제 상품화 과정에도 대입되기 때문에 10대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아까 성매수 시도자의 반응에서 본,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상관없다'라는 인식은 아주 오랜 유구한 역사가 있는 문화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보도방 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도방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업소들에 여성을 조달해주는 일종의 무허가 직업소개소입니다. 보도방은 지금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 대부분이 보도방을 통해서 업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사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착취의 현실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 맥락은 뭘까요? 어떤 힘이 개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2001년에도 워낙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하다 보니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관련된 청소년은 성매매 여성의 1/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성산업에서 부족한 여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등장하던 인신매매 피해자의 70% 정도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욱 여성계와 사회운동은 나이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에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특정 직군에 있는 여성들은 꼭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해요.¹⁸⁾ 특정 직군이 무엇인지 법에 명시해 놔어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은 매독 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일하는 이 영업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티켓다방입니다. 티켓다방은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 지역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3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다방을 조사했는데, ‘전국 다방 중 50.4%가 티켓영업’ 즉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켓다방으로 파악된 업소의 74%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고, 업소당 평균 3.3명의 청소년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해요. 이런 실태가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고발되고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기를 단속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를 단속하면 여기로 가고, 이러다 지금은 성매매의 알선 고리가 시대에 걸맞게 조건만남, 온라인 앱으로 이동한 거죠. <그림27>은 2016년에 성매매 실태조사를 한 결과예요. 청소년의 조건만남 주요 경로를 보면 절반 이상이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큼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매매에서 성적 권리를 말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동시에 고민하기도 해요. 제가 성매매 현장에서 접한 여성들은 성적 권리라는 이유로 성매매 산업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산업이 판을 쳤을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성매매 산업이 판을 쳤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대상일 뿐입니다.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여전한가? 들여다보면 10대 여성들은 변화가 없어요. 10대 여성은 여전히 과잉성애화되어 있고, 아까 양지혜 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다움’ 자체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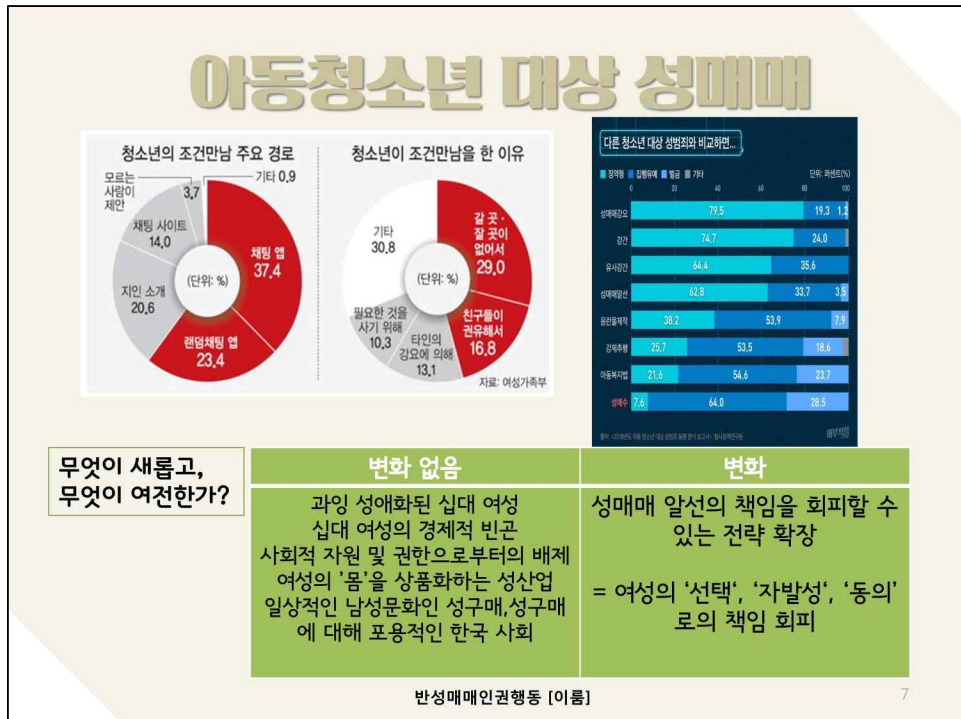


그림27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실 성매매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10대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인 접근성에 굉장히 제약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대 여성들은 사회적 자원과 권한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어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성산업이 한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남성의 성구매가 일상적인 남성 문화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양지혜 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에 대한 혐오가 있고 ‘미성년자와 연애하는 성인은 능력이 없어서 또래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이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던 성구매 후기들을 보면 오히려 어린 여성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았을 때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아주 ‘능력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남성 문화와 한국사회는 9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한 것은 뭘까요? 알선자들이 성매매 알선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개발되고 있죠.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성매매 실태가 가시화되면서 알선자들도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업이었을 테니까. 돈벌이었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알선자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여전히 남성 구매자들은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린 여자를 찾는데,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아동·청소년 여성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결과로 ‘여성의 선택이다, 그들이 원해서 했다, 알고 했다, 동의했다,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구조를 끊임 없이 산업 안에서 확장해 온 것입니다.

조건만남앱이 대표적이죠. 조건만남앱은 앱 이름이 ‘조건만남앱’이 아니에요. 스윗톡, 앙톡, 즐톡……이런 이름이죠. 채팅앱을 이용해서 채팅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팅앱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왜 이렇게 많은 남성이 대낮에도 채팅앱을 켜고 있느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채팅앱은 불법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자들은 채팅앱을 통해 돈을 벌지만, 앱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단체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 생겼죠. 채팅앱에서 청소년들이 가입하지 못하게, 성인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올해 법이 제정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할게요.

덧붙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27〉 오른쪽 이미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비교한 표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성매수’예요. 맨 위에 있는 ‘성매매강요’는 징역형 79.5%, 집행유예 19.3%, 벌금 1.2%이고, 그다음에 ‘강간’은 징역형 74.7%, 24.0%, 기타 1.3%인데, ‘성매수’는 징역형 7.6%, 집행유예 64.0%, 벌금 28.5%예요. 성매수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

들을 조금이라도 더 처벌하고 규제하고 제약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청법」에 개입한다든지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대안을 찾는 논의가 여성운동 지형에서도 계속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맥락 속에서 같이 고민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이번 N번방 관련 법 개정을 보면서 의제강간보다 훨씬 주목했던 것은 「아청법」상 ‘대상 청소년’ 조항 삭제였습니다.¹⁹⁾ 「아청법」이 드디어 개정됐다!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아동·청소년, 10대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겠구나.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었어요.

「아청법」에는 각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들이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목록화되어 있는 법의 핵심은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경찰들은 그에 맞춰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매매만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성매매 피해자만 ‘대상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들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을 동석하면 피해자로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피의자 또는 행위자로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청법」이 개정된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18세 이상의 여성들은 왜 여전히 피의자로 취급받고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아청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할까?²⁰⁾ 왜 처벌해 왔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자발성’ 담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만 쓰는 ‘자발성’ 담론이죠. 성매매 산업의 원인을 나이 불문 여성에게서 찾는 관점과 관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네가 돈 벌고 싶어서 했잖아’라는 편견과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매매 산업은 여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산업이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강조하고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고, 남성들이 여성을 희롱하고 추행하고 폭력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친분을 쌓아왔고, 이것이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성이 구축되어왔고, 여성들이 끊임없이 빈곤한 상황에 머물도록 하는 경제

19) 각주 14 참조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는 ①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②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한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한 자’로 분류되어 피해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다.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 산업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확장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성매매는 다른 여성 대상 폭력 범죄와는 다르게 다뤄져 왔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대상 청소년’ 또는 ‘성매매를 한 자’로 분류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아야 했어요. 경찰이 성매매 사건은 여성청소년계에서 다루지 않는 것 아니냐요?²¹⁾ 성매매 사건은 여성청소년계 소관이 아닙니다. 지능팀이거나 생활질서계 소관이에요. 저희는 여성청소년계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별이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는 범죄,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매매에 연루된 또는 유입된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시민권을 누리거나 획득할 수 없었을까요?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담론이 영향을 미쳤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한 여성들은 처벌해 마땅하다’라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들이 명확하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권력 관계잖아요. 동의/비동의, 자발/비자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맥락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림28>은 성매매 권력 관계를 설명할 때 정리해서 쓰는 표인데요, 권력 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화폐가 있는 사람이 화폐가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권력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 강제, 협박……이렇게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만 드러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잡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권력 문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선택’하고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 이야기를 같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묻히고 있는 현장, 현상, 사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동의’하고 누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건화되지 않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매매 과정에서의 성폭력은 정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의’했다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룰

21) 2012년 경찰은 성매매 단속 업무를 여성청소년계에서 생활질서계로 이관했다. 당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자 여성청소년계가 학교폭력 예방과 단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전문성과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성매매가 풍속업소에 해당해 생활질서계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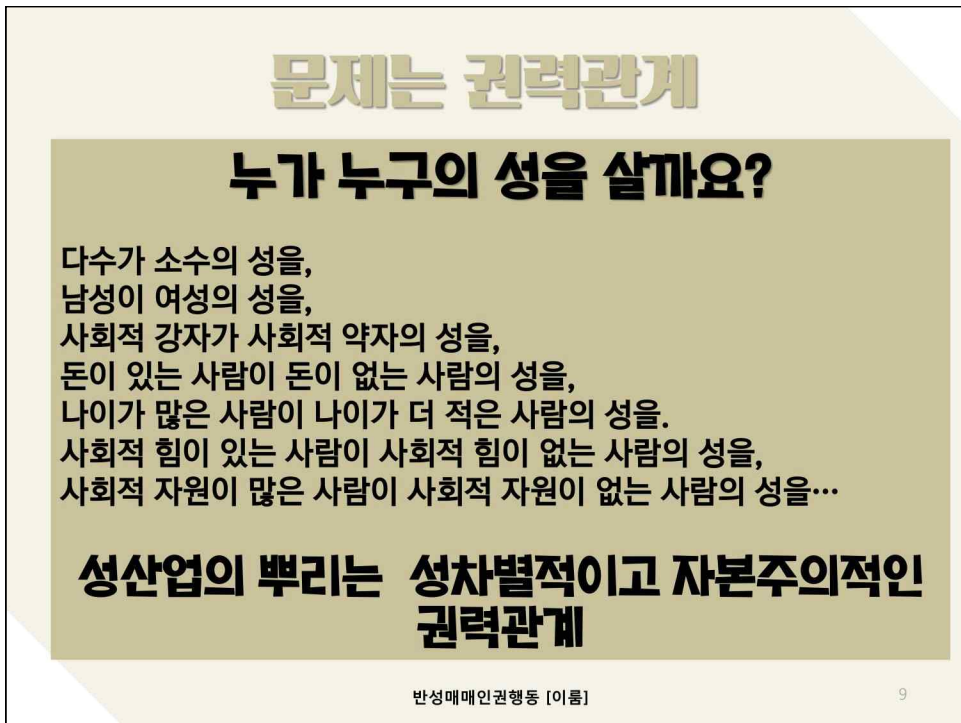


그림28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처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2016년 연구자 민가영님은 「'피해 협력성'을 이끌어내는 '비강압적 착취'의 맥락에 대한 연구:십대 가출여성의 가출 팸 관계를 중심으로」²²⁾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자신을 착취하는 상황에 머무는가?”, “착취적 상황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착취의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질문을 같이 던졌을 때 ‘동의’에 대한 논의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사방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그루밍’이라고 표현되듯 피해자를 어르고 구슬리면서 작동하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나이’만을 축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성별, 나이,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 인종,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여러 가지 권력의 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의’의 맥락 속에 피해자가 착취에 협력하게 되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권력의 축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방에서 작동하는 권력이 어떻게 ‘동의’하게 하고 어떻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22) ‘피해협력성’은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가 자신을 착취하는 구조에 협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비강압적 착취의 맥락’은 강제와 폭력 등의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약자가 자신을 착취하는 상황에 협력하게 만드는 맥락을 말한다.

문제는 권력관계

“네가 돈 필요해서 빌렸잖아?”

“네가 돈 벌려고 이 일하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맥락에 대한 이해없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권력문제를 무화하려는 시도

누가, 왜, 어떻게 '선택'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까?

권력이 작동하는 맥락을 섬세하게 봐야 이분법적인 담론 사이에 무수한 스펙트럼으로 놓인 현실에 주목할 필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10

그림29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특히 성매매의 경우에는 ‘화폐를 줄 수 있는 사람’과 ‘화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권력 관계가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만 19세가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성매매 산업의 특수성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권력 관계의 여러 가지 축들 중에서 나이만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아닌 다른 무수한 권력의 축들은 무시되거나 삭제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권력의 축들을 같이 고려하는 연속선 안에서 나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란 무엇일까? 성매매 산업에서 ‘동의’란, 누군가 돈이 필요한 상황일 때 고수익으로 홍보해서 유인하고, 성적 침범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권력 관계를 재확립하고 여성을 비인격화한 뒤에, 그 경험을 한 여성이 스스로 피해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처벌받아 마땅한 여성’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것을 상기고 내재화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여타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패턴이 있거든요. N번방과 유사하죠. 성매매 산업에서 아주 고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동의’의 패턴입니다. 이런 과정이 패턴화되어 있을뿐더러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매매는 동의한 성관계’로 여겨져 왔죠.

저희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분명히 피해 여성은 성폭력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진술을 바탕으로 갑자기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하고 피해 여성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10건 중 8건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동의'한 성관계로 여겨져 온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동의'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매매는 '시간'과 '여자'를 사고파는 산업으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이것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떠한 잡음도 없이 특정한 시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서 말하는 잡음은 남성 구매자가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완성되죠.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구매자는 특정한 시간 동안 타자의 이동성, 접촉의 경계, 감정의 표현, 제스처 등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성매매 산업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체가 상품으로써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체적인 '동의' 과정에 대한 각본 자체가 없습니다. 나영 님 발표에서 '한번 동의했다고 계속 동의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다시 동의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동의하거든요. 하지만 성매매는 '동의' 과정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구성되어 와서 각본이 부재한 현장입니다. 실제 성매매 산업의 실태 또는 속성이 이러하다 할 때, 성매매에서 '동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의' 개입하기, 고민하기

1) 성매매 산업에서 '동의'란..

고수익 홍보->성적 침범/성폭력으로 권력관계 재확립 및 여성의 비인격화->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처벌 상기 및 내재화->배제와 고립

- 성매매는 '동의'한 성관계로 여겨져 왔음.
- '시간'과 '여자'를 사고 파는 산업.
- 잡음없이 '시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 성매매
- 특정한 시간 동안 타자의 이동/접촉경계/감정의 표현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대 만연
- 구체적인 동의 과정에 대한 각본 부재

성매매에서 '동의'를 묻는 행위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할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가 ‘동의’를 고민할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성매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의미 있을 수 있을까?

‘동의’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쩌면 균열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동의’를 구했니? 어떻게 ‘동의’를 구했니? 끊임없이 구매자에게 묻는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이 과정을 계속 묻는다면 아마 대답은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냥 ‘돈 줬다’만 있을 거예요. ‘1시간 비용을 냈다’만 있을 거예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성구매자가 성구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맥락과 배경은 무엇인지, 무엇을 샀다고 생각하는지,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과 ‘여자’를 샀다고 여겨온 남성 문화의 착각 혹은 환상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협상이라든가, 이미 돈을 받았든가,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동의’로 해석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성매매 산업은 동의 아니면 비동의라는 이분법에 갇히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사람이 성매매에 ‘동의’하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누락은 지금부터라도 촘촘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발표자들도 추천해주신 책 『성적 동의:지금 강조해야 할 것』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동의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의미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가 가능한가? ‘동의’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성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교육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제 환경이 변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매매 산업 바깥에서도 여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개선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자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빈곤 문제, 특히 여성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매매 산업

'동의' 개입하기, 고민하기

2) 성매매과정에서 적극적 '동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구매자/알선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쥐려면...

언제든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성매매된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남성에게 팔리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자/알선자가 지불하는 돈을 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마찬가지.

**성매매 산업 바깥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즉 여성에게 불공평한 사회구조 개선이 첫째이자 궁극의 조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15

그림31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성매매 현장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의했냐, 하지 않았냐,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이런 식으로 논의되어왔던 사회적인 담론 구조 속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은 누락되거나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변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폭력이라고 부르고 어떤 현상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 어떤 행위는 폭력으로 인정받고 어떤 행위는 폭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밀성과 착취, 동의와 비동의, 자발과 비자발 등이 이미 혼재되어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해서 어렵고 복잡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안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이해하고 개입하고 실천해야 하겠죠.

나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사회적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작동하는 데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축들을 같이 보는 방향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질문, '동의'에 대한 질문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을 면밀하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유나 님께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인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의제강간죄 성폭력 피해자로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나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으로 작동할지 오히려 검열로 작동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아까 민들레 님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 두 가지 쟁점을 발표해주신 것처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지원할 때도 수사 기관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거든요. ‘네가 10대처럼 입고 있었냐? 상대방이 네가 10대라는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있었냐?’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한 국사회에서 취급되는 나이가 10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폭력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제강간죄 역시 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어려운 이유는, 법 자체가 문제여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법은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너무 인식 또는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지점도 좀 분리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됐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을까? 성매매 과정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성매매도 했고 성폭력도 했으니까 가중처벌한다’라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대응 집담회

토론

다 같이

사회자 마지막으로 토론 순서가 남았습니다. 첫 발표를 해주신 나영 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되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정 님께서 대신 토론자 역할로 참여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나영정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웃음) 제가 남은 시간을 함께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회자 집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응답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신청자분들께서 사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과 오늘 발표하는 동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신청자분들께서 사전에 해주신 질문들을 살펴보면, '동의'에 대한 개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오늘 발표들을 통해서 조금은 아셨을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나 님이 '비강압적 착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당사자는 피해로 인지하지 않고 '나는 동의했는데'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친밀성을 이용한 착취일 수도 있고 그루밍 성폭력일 수도 있고 성매매로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의 과정일 수도 있고 인신매매일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죠. 이런 경우에 당사자와 어떻게 소통함으로써 본인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나요?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권현정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존중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다들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탁틴내일도 그런 사례를 지원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정리하실 수 있게 도와주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탁틴내일은 법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거든요.

양지혜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있었는가 말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

이었는지, 그 선택의 전제 조건은 어떠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까 발표했던 ‘왜 일탈계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학교나 가정에서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트위터나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음이 조금 더 안전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자발성으로 보아야 할까요? 착취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다른 선택지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은 한 번도 ‘동의’를 경험하고 존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는 미숙하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대신 할 거고 이것이 너를 위한 방법이야’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동의’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동의’ 개념을 더 많이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시도해볼 수 있어야만 자신의 언어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청소년분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들레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과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연애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당사자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주변인에 의해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주변인이 이미 언어를 줍니다. ‘성폭력’이라고. 당사자는 사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실제 ‘사귀는 사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건 성폭력이야, 네가 당한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라고 그 관계를 정의 내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은 이미 주변인에 의해 자신의 경험이 정의되어버린 채로 경찰서나 성폭력상담소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미리 듣고 오는 거죠. 성폭력상담소에 오신 분들께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면 ‘성폭력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폭력이 뭔데요?’라는 질문과 함께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폭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당사자의 맥락과 다른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경험으로는 그 사람과 즐거운 기억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오로지 폭력인 경험만, 혹은 오로지 즐거운 경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가운데에서도 그 즐거움 때문에 어

떤 폭력이나 힘들을 건디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즐거워도 폭력 때문에 그 관계를 끝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사자에게 좋았던 기억조차도 '알고 보니 폭력이었어, 그놈은 나쁜 놈이었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는 것은 사실 당사자의 삶의 과정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끝까지 동의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좋아. 그래서 손잡고 보보하는 것까지 내가 동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손이 다른 곳까지 왔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나를 더는 안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이 행위를 참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된 맥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당초 성적 존재로 존중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실천에 대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 '동의'라는 게 무엇이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사실상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식을 배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로만 호명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건 폭력이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불쌍해, 그 사람 감옥 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가해자를 걱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동의 혹은 비동의, 자발 혹은 비자발로 일차원적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순간에 '이건 완벽한 동의야'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처음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성착취·성폭력·성매매를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답이 있어요. 때에 따라,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해석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 과정에서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그 해석이 1시간마다 변하든 몇 년 뒤에 변하든, 상관없이 해석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잡한 상황에서 당사자와 어떻게 소통하면서 갈 수 있을까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과 약간 다른 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오히려 당사자의 경험을 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당사자들은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책임일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아무도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지 않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것을 감수했다고 해서, 그것의 폭력성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겪은 고통이나 피해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점들을 좀 더 시간 들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영정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와 관련해서 동의 능력을 의심받는 사람,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 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유아든 식물인간이든 동의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이 그 사람이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은 동의 능력이 있고 매 순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이유로, 타인의 관점에서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사람의 동의가 무시되고 철회되고 그것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 전제가 ‘동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동의 인권이나 혹은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최선의 이익에 따라서 확인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이 너무나 쉽게 보호 감독자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동돼서 이야기되지 않는 한 성적 동의와 다른 식의 동의에 관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에 동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교육받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확인했는가? 취약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로는 취약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계속 말하면서,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것인지 누가 언제 동의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누구와 같이 살고 싶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동의를 구했나요?’라는 질문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성적 동의에 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성적 동의 문제를 특별하게 특수한 것으로 보게 하고,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반성폭력 운동 자체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어떤 식의 동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수사 재판 기관일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 전반 또는 대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영정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의'를 구할 역량도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동의하는 능력'이 아닌 '동의를 구할 역량', 즉 어떻게 동의를 받을 것인지, 상대방의 동의를 나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역량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동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함께 논의하고 동의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을지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권현정 저는 주로 청소년들을 만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때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관계에 작용하는 힘과 권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요. 청소년들은 예를 들면 소위 '일진', 친구, 선배가 있는 것도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예시를 들면서 보이지 않는 힘과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자신이 힘이 우세한 위치에 있다면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는 경우는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하는, 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감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 못 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찬성했던 단체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이 법이 인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혜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해보았는데, '동의'는 일상과 연결돼있는 개념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성적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고 일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았던 경험이 어떤 성적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의'를 교육하려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동의'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동의'에 대해서 고려할 수조차 없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웹툰 작가 서밤님께서 어린이날에 올렸던 짧은 만화를 보면,²³⁾ 아동이나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울거나 떠드는 것, 아이답게 혹은 청소년답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질타받는 상황에서는 마

23) 2019.05.04. 「노키즈존 있는 어린이날」, 서밤,

음 편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집담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동의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성숙한 척, 나이 많은 척해야 하는 게 지겹다.” 나는 실제로 미성숙할 수 있고 나의 동의 표현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해서 동의할 수 있으니까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숙하고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이분법이 있는데, 그 이분법 사이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이들도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고 동의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들도 성적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이 어렵기도 했고 ‘여성 청소년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어느 부분부터는 ‘동의’할 수 있고 어느 부분부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일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문제에서부터 문제의식을 시작해야만 일탈적인 성적 경험을 금기시하거나 피해로 재단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위티에서도 복잡한 맥락들 안에서 성적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 저는 우선 ‘동의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교육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앞서 ‘동의할 준비가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교육해야 할 아이나 동생이나 학생에게,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의견에, 나는 동의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들이 ‘NO’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야, 선생님 말이 맞아, 엄마 말대로 해’라고 답한다면 사실은 ‘동의’를 교육할 수 없을 겁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실패할 권리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100% 완벽하게 옳아야 한다는 것은 강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끝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른 대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교육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한 판단이나 선택이 적절치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혹시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방식이 아

닌 '그럴 수 있었구나, 같이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어렵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은 평상시에 '어른 말 들어, 선생님 말 들어, 엄마 말 들어'라는 말 속에서 살아왔고 끊임없이 활동가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이건 아니지'라는 자책과 자기반성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완성된 사람이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를 교육하는 과정보다는 동의할 수 있는 환경, 비동의를 말할 수 있는 환경, 비동의를 말해도 화내지 않는 환경, 거절할 수 있는 환경,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피해자로 호명될 때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해자만 나쁜 놈이에요'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욕망했던 것은 쉽게 무시되고 사실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욕망했는지, 욕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조심스럽지만, 청소년은 '그래, 내가 20살까지만 버텨보자'라는 한계라도 있는데 장애인은 40살을 먹어도 50살을 먹어도 여전히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나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 '누군가는 무능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얼마나 모순적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여러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되어서 제 고민도 좀 더 풍성해진 것 같고, 우리 회원님들과 장애여성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제가 교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앞선 대답들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이 질문이 걸리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안 좋아해요. 성매매를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동의' 역량을 교육으로 키울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지금 저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과제이지 않나요? 그때그때 다 동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떨 때 동의를 하고 어떨 때 동의하지 않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야 알 때도 있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과제이기도 해서 과연 이것을 교육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현재는 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나름대로 동의 역량을 키워 왔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역량을 어떻게 키워 왔지? 계속 키우고 싶어서 키우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일상에서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교육일까요? 일상을 민주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육해야 한다면 저는 수사 재판 기관을 교육하고 싶습니다. 수사 재판 기관은 동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라 ‘동의는 진짜 머리 아픈 거고 너희도 머리 아파야 한다, 그렇게 머리 아픈 과정을 겪어야 이게 동의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교육 말고 일상을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권력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까 논의하는 겁니다. 특히 생존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친밀성, 관계도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생존의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각종 권력 관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겠다 싶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되게 놀랐고 좋았어요. 보통 성매매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사실 성폭력 이야기와 성매매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특히 나이를 시작으로 권력 관계 문제를 확장하면 성매매는 권력 관계 문제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성폭력도 마찬가지겠죠. 이 권력의 축들이 어떻게 미시적으로 작동하고 내재화되어 있고 어떤 장치들이 어떤 권력을 강화하거나 변형시키고 있는지 논의가 확장된다면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정 저는 ‘잘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냐, 언제 누구랑 같이 배우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동의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좋냐, 싫냐, 이분법적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어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할 때는 지금 교육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폭력을 피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저희가 확장해야 할 지점을 논의합니다. 즐거움과 쾌락까지 함께 이야기할 때 성과 관련된 어떤 경험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살고 관계 맺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를 구하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자기와 상대방의 쾌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안에서는 어떤 식의 동의, 어떤 식의 확인이 가능한가? 까지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성이라는 담론 안에서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각자 스스로도 즐거움과 쾌락을 알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시작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끝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장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회의를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성폭력 상황에서 어려운 지점들이 바로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얼마만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없다면 추상적이고 결국 개개인의 구매력이나 능력 문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을 얼마나 민주화할 수 있는가?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언어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은 어떻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약한 구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구조의 변화는 단번에 이뤄지기 어렵고 장시간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앞서 민들레 님께서 실패할 권리를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과 실패와 여러 가지 시도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해를 감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적 실천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위험과 해악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면 교통사고라는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위해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집담회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이후로 공개적인 논의가 처음 있는 자리였는데, 세어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을 운동 단체가 주도하지 못했고, 정부가 N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 문제를 핵심 대책인 것처럼 끼워 넣은 이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더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찬반입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죠. 인권단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수사 재판 기관은 정말 교육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돼서

마음 편한 사람은 수사 재판 기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이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청소년 운동 주체들과 이 과정을 먼저 경험한 장애인 운동과 조금 더 자주 만나서 동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강간죄 개정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들을 다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위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그 밖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질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입증의 문제, 찬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법을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 활용해야 하는 건지, 다양한 고민과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집담회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함께 논의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또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펴낸곳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 이미경

펴낸날 : 2020년 7월 23일

발표·토론 : 나영, 권현정, 양지혜, 민들레, 유나, 나영정

속기 : 권지영, 주현

포스터·표지 디자인 : 유경빈

편집·내지 디자인 : 앞

내지 폰트 : KoPub돋움체, HS봄바람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13일 개소하여,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위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려온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여성주의에 기반을 둔 성폭력 생존자 지원, 성문화 개선 운동,
법·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소 올림과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가 있습니다.

후원 안내

정기·일시 후원 <http://sisters.or.kr/>
문자후원 #2540-1991(건당 3,000원)

